긴급점검-흔들리는 표문화수도

하 전당 동력 인적자원 확보 절실

전당 개관 '코 앞'…인력·예산 대책은 '까마득'

전담인력 300여명 시급한데 '법인위탁' 논란에 미적

콘텐츠 예산도 매년 市·국회의원들이 따와야할 판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문화전당 운영전담 인력은 핵심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복합문화센터인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양대 동력인 셈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용역결과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문화창조원·정보원·어린이문화원·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용 인력은 300여명으로 추정됐다. 문화전당은 부지면적 만도 12만8621㎡(3만8908평)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문제는 이 방대한 시설의 개관이 코 앞인데도 문화전당 주무 부처인 문화부와 관할 추진단은 지금까지도 전담인력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술 더 떠서 문화부는 최근 '아시아문화원'이라는 특수법인에 문화전당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 광주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기존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한 특수법인이다. 이런 내용은 문화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법령 개정 취지는 "문화전당이 창의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가 아닌 법인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문화부가 문화전당 전담인력과 기구를 정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우회방안으로 기존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활용하려는 것은 문화전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전당 개관 초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역의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다. 법인으로는 이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이런 이유로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운영하면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는 문화부가 문화전당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전당 관련 예산으로는 정부가 확정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건립·운영비 등 2조8000억원이 사실상 전부라는 한계가 있어서다.

나머지는 매년 광주시,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따내야 하는 예산'이다. 이 예산 가운데는 문화전당 개관콘텐츠 구축 재원이 포함도 있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 추정한 개관 콘텐츠 관련 예산액이 1000여억원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전당의 순항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요 예산은 ▲시즌제 공연제작 92억원 ▲전시콘텐츠 제작 406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6억원 ▲전당공간구성, 장비구입 412억원 등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최근 문화전당 법인위탁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문화부와 추진단이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꾸리지 않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애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취지대로 문화전당 인력을 구성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유엔 공동행사 YLP 북한 청소년 참가 무산되나

北, 명단 통보 안해

오는 22일 광주에서 열리는 YLP(유스리더십 프로그램) 유엔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북한 청소년 4명이 불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북한 청소년 초청으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15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 광주 호남대에서 열리는 YLP 행사에 참가할 청소년은 18개국 30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애초 4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북한은 명단통보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UN을 통해 북한 측에 지난 9일까지 참가명단 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13일까지 마감시한을 최종적으로 연장하고 재통보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북한 청소년이 YL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최종 마감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북한이 UN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참가 청소년의 명단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의 마감시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다음주 월요일(19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만약 이날까지 명단이 온다면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 볼 계획"이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정치적 부담 없는 '이산 상봉' 북한도 논의에 적극 응할 듯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계할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북한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은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논의에는 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남북 당국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사안인데다 북한이 지난달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제2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남측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유로 적십자 실무접촉만 수용하자 북측은 두 회담 모두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화해 제스처'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남북이 합의된 7·4공동성명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던 대로 지난달에는 북측 댐 방류 계획을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다른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는 응하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함께 하자고 다시 제안하거나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데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0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분단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후 2000년부터 18차례의 대면상봉과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양측에서 4321가족, 2만1734명이 만났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이뤄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8년에는 성사되지 못했고, 2009년과 2010년 한 차례씩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5부요인 등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이산 상봉 환영"…민주 "그런데 왜 국정원 불법 입장 없나?"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여야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정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고,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및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한 간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정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놓으셨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과 해법을 기대했지만 빠져 있다"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7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타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꾀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타리):051)818-8800 서면2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타리):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타리):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타리):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심원로타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타리):064)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